

◎주요 대선주자 농정공약 (직불금강화, 쌀정책개선, 지속가능한 농업육성)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



손학규 후보



심상정 후보

●문재인 후보 : “농업에 정당한 대우” 농업예산 50% 직불제로 청년취농직불제 도입, 군대 등 공공급식에 우리농산물 공급 확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농업직불금 강화, 공공급식의 우리 먹거리 비중확대, 청년취농직불제 도입을 약속했다. 또한 농가소득 안정 차원에서 농업예산 중 14% 수준에서 50%까지 직불제에 할애하겠다고 밝혔다. 50%로 확대되면 한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은 연간 500만원가량 될 것이라며, 공공급식 강화를 통해 농축수산업을 대표적 내수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정 후보 : “3농 혁신 전국 확대” 농업·농촌 중요성 알리고 살기좋은 농어촌 구축, 헌법에 다원적 기능 담고 도시·농촌 상생정책 추진 : 3농 혁신은 농어민을 농정의 주체로 삼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 ▲행복한 농어민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또 개정 헌법에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 “농업, 생명산업으로 육성” 기본소득제 도입 농가 가처분소득 증대, 남북 농축산물 교역하도록 DMZ에 평화지대 조성 : “농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해 농가 가처분소득 늘리고, 직불제를 개선해 농민 영농의욕 고취”“밥쌀용 쌀 수입 즉각중단” 가공용 의무수입쌀도 WTO와 협상을 통해 삭감 및 친환경유기농업 확대”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 : “농업은 세상의 근본” 농민단체가 제시한 농정 10대 과제 정책에 반영 “지구 인구가 70억명을 넘어 곧 90억명이 될 날이 머지않았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

상기후로 식량생산이 급감할 가능성" "식량 무기화는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고, "저역시 농업·농촌·농민을 근본으로 생각하며 '살맛 나는 농촌, 행복한 농민'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 당은 대선공약 추진방향으로 △환경·생태형직불제 도입 △쌀 소비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개편 △소농대상 직불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손학규 후보** : "진정한 식량주권시대 열 것" 농산물수매계약제, 쌀100만t 가축사료로 농산물 수매계약제 도입 : "농산물 계약생산을 강화하고, 수매물량은 수급안정을 위한 비축과 공공급식은 물론 민간 부문 식자재용으로 사용하겠다"며 "수매물량과 가격은 생산자·소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산물유통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 : "지속가능한 농업조성" 논·밭 고정직불 상향조정, GMO금지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쌀 친환경 고정직불금 1ha당 300만원 지급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친환경로컬푸드 거점시장 지정 ▲권역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 ▲GMO 개발 금지 및 식품의 GMO 표시 의무화 추진

◎**비료공정규격 개정안...비료중 잔류농약 허용기준 새로이 설정된다**
농촌진흥청은 비료공정규격을 개정하기 위해 3월29일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비료중 잔류농약기준을 농산물 잔류농약기준의 최대치를 적용"하고, 아주까리박 원료사용 유박비료제품중 리신함량 10ppm으로 설정하며, 상토 2호 규격에 질소함량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료공정규격개정안 입안예고예정

이에 따라 일부 퇴비 및 제4종복비에서 비의도적으로 극미량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고 비료중 잔류농약허용기준이 설정될 경우 유기농자재도 이를 준용할 경우 비의도적 농약검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현황 및 문제점** : 농관원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확대함에 따라 제4종복비 및 퇴비 등에서 극미량의 농약성분이 비의도적 검출되는 사례 발생, 비료공정규격 제6조 "농약성분 불검출"규정상 지자체의 행정처분 문제가 논란됨

-검출사례 : 퇴비업체 3개소에서 비펜스린 농약 극미량 검출, 제4종복비에서도 극미량 농약성분검출 농관원, 지자체와 논란 : (원인) 축사소독용 살충제 살포, 볏짚 왕겨중 검출 등 퇴비에서 농약 극소량 검출되고, 해조류추출물을 비료원료로 사용 ⇒해조류추출물에는 천연적으로 오옥신, 지베레린, 6BA 등 미량함유되어 잔류농약이 극미량 검출된 사례가 있으나 비료중 잔류농약 정량한계 0.05 ppm으로 설정 문제됨

-사료중 농약관리기준 : 비의도적 특성 감안 0.5~1000ppm로 광범위하게 설정, 허용오차를 평균 5%로 두고 검출판정시 이를 환산 기준미달 처분 (에디펜포스 50, 크롬 100~1000ppm), 식품첨가물기준 : 비의도적 감안 신축성(0.1~10ppm)

- 당회 및 유기비료조합에서 잔류농약허용기준 설정 건의(농진청 고시개정)

◎ **비료사무 농진청→ 농관원 이관이슈 비료관리법 개정안 국회에서 보류**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강화 등을 골자로 한 규제 위주의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심의중인 바 동법 제26조(위임) 및 시행령에서 농식품부 비료관리 위임사무를 농진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할 예정이었으나 여러단체들이 국회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보류되었으므로 차기정부로 처리가 넘어갈 것으로 판단됨

<개정안 골자>

- ① 무상 공급비료가 토양 오염 및 작물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공급 비료도 공정규격 준수, 수입 무상공급도 수입업 신고를 하도록 함
- ②유기질, 부산물비료만 수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위해성이 우려되는 모든 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하여 수입 제한 및 위해성 검사를 하도록 함
- ③비료생산업자 등의 휴업 신고제도 신설 ④비료의 성분·효과 등을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지위승계 제도도입 ⑥ 비료생산업의 등록 제한 일부 폐지 ⑦제26조 (위임조항)농촌진흥청장에게 비료관리사무 위임⇒농촌진흥청장 및 소속기관 의장(농관원장)에게 위임

◎ **농관원,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심의위원회 구성 등 규정 재정비 한다**

금년부터 유기농자재 사무를 이관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당 협회를 포함한 대학교수, 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심의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한다.

민간 3개공시기관을 재심사하여 공시기관 연장을 허용한 바 있으며, 또한 공시제와 인증제를 통합하기 위한 작업을 마치고 자율효과표시제 도입 등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회를 4월중 개최 확정할 예정이다.

◎ **유기농업학회 주관 “차기정부 친환경농업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차기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 방향 제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친환경농업 단체들과 함께 오는 4월 7일 오후 2시에 서울 aT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 정책제안 요지)

- ①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원예산 확대 : ('17) 31억→(향후) 200억원
 - 유기농자재 사후관리 비용을 정부예산으로 지원
- ② 유기농자재를 농식품 수출정책 지원대상에 포함 적극적 수출확대 지원
- ③ 분석에 의존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탈피 시스템인증으로 전환
 - 유기농업자재중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조속히 설정, 검사대상 성분 고시
- ④ 친환경유기농자재 R&D 지원을 강화, 효과 우수 값도 싼 검증 제품이 많이 개발되도록 품질 우수제품 지원 방안 마련 등

◎ **2017 대규모 수출상담회 BKF 추진계획(aT와 협회 공동주관)**

당 협회 등 6개 협회와 aT가 공동주관하는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Buy Korean Food & Agriculture 2017)가 6.13~6.14(양일간) aT센터에서 열린다. 바이어 초청비용은 aT가 지원한다. 금번 수출상담회는 농식품분야 수출 매칭상담회에 당 협회가 참여 지원받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 각 협회별 바이어 및 수출업체 모집 선정

-식품산업협회 등 협회별 바이어 초청인원 8명(당 협회는 10명)

-연관산업 수출업체 및 바이어는 협회별로 구분하여 매칭상담하고, 각 협회에서 매칭 방식 결정, 협회별로 참여국가, 상담품목 등을 특화한 테마관 운영예정으로 컨셉 등 사전 검토 필요

- 협회별 주력시장, 전략상담품목, 기타 마케팅 포인트 등을 활용한 홍보 컨셉/테마를 특화하여 별도 구획 및 운영 : 테마관 내부에 홍보관 및 상담부스를 배치하여 상담 시너지 효과 제고

○ 상담회 다음날(6.14일) 바이어 일정 결정 : 농기계, 비료/사료, 농자재 등 연관산업 생산 현장 방문 및 필요시 추가 상담 간담회개최

◎ **농식품부, ‘무농약 가공식품인증제’ 시안 마련**

농식품부는 2월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의 가안을 마련한 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안의 인증대상은 무농약·무항생제 농축산물과, 식품제조 시 무농약원료를 95% 이상 사용한 식품이다. 95% 미만 사용제품은 제한적 표시까진 허용한다. 제한적 표시제품은 유기원료의 사용 없이 무농약·무항생제와 일반농산물만 사용한 식품으로, 제품 주 표시면 외에 표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정한 상태이다. 한편 제조 원료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무농약·무항생제를 주원료로 하되, 유기식품과 5% 미만의 일반농산물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농관원은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함에도 유기 인증을 받지 않고 일반식품으로 출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인증 취득에 필요한 컨설팅비용 4백만원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 **“국민행복농정연대” 새 정부 농정과제 건의**



지난 2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19대 대선후보 초청, 농정과제 공동제안 발표회'에서 새정부 농정과제 3대 목표로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도농공생·남북협력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주체육성·지역재생 △대통령이 책임지는 재정개혁·추진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제1과제로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 및 지역 Food Plan 제시.

제2과제는 농가소득 증대와 경영안정 보장'. 제3과제는 '남북 농업협력과 한반도 농업공동체 실현'. 제4과제는 '가족농과 여성농업인 보호육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업·농촌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주체강화. 제5과제는 친환경 농업분야인 '환경보전형 농업시스템 구축 및 지속가능한 농촌환경정책 추진'으로 우리 농정의 기초를 '친환경'으로 전환해 친환경농지 5년내 10% 달성, 친환경농업직불금 영구지급과 공공급식분야의 친환경급식화를 제안했다.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이 국회 본의회 통과해 본격 시행된다.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할 경우, 생산관리지역 등에서 음식점·숙박시설 등 설치가 가능해지고, 또한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를 위해 기존 12개 인허가 → 11개 인허가 추가하고, 원상회복, 사업장 폐쇄 등 사후관리 규정 및 인증승계 제도를 개선한다.

◎한·미 FTA 5년경과·쇠고기·과일수입증가 농축산물 수출입 65억달러 적자

농경연이 분석한 한·미FTA 발효 5년차 농축산물 수입·수출액은 각각 71억만 달러·7억만달러로 나타났으나, 이행 5년차를 기준으로 대미 농축산물 수출입 수지는 64억6천만달러 적자를 보였고, 이는 대미 수출 총액의 9배가량이나 된다. 관세율 인하로 인해 주요 경쟁품목인 쇠고기와 과일류는 수입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농업 대응전략 연구단 발족

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이 농업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정책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조직을 신설 운영한다. 이를 위해 최근 '4차 산업혁명,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단'을 구성했다. 연구단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업생산과 농·식품 유통, 식품산업 및 소비, 농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대응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농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시스템 구축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한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시스템은 전국의 병해충 발생농가 현황과 예찰트랩 설치 장소 및 병해충 발생면적과 발생지점 간 거리, 상세한 지형정보 등을 지도상에 표출해 직접 인쇄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 찾는 농산물 → 당도가 1순위 경쟁력

과일 구매기준 '당도' 1순위 중도매인 시식후 가격 매겨, 영양제 활용 당도 높여야, 항상 높은 값 "수입과일 이기는 비결

소비자는 사과·배·수박 같은 과일·과채류를 구입할 때 맛, 그 가운데서도 단맛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경향은 각종 조사 결과로 나타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6년 12월 발표한 '2016년 식품소비행태조사'에서 응답자의 43.8%가 과일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맛'을 꼽았다. 또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조사한 '2016 농식품 소비트렌드'에서 소비자는 토마토·수박 등 과채류를 고를 때 당도를 우선시한다고 대답했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과일·과채류는 당도가 높아야 좋은 가격을 받는다고 한다.

◎정부, 내년부터 연 5만t 규모 쌀 해외원조 추진

정부가 2018년부터 쌀 공급과잉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해외 원조를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식량원조협약 연내 가입을 통해 2018년부터 연간 460억원(쌀 5만t) 규모의 식량원조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쌀 해외원조가 시작되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국내 쌀 공급과잉 구조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자재 소식]

◎비료비용 절감을 위한 국회토론회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료비용절감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비료보조방식 개선을 통해 농가의 비료비 부담을 줄이자'는 비현실적인 주장들이 제기됐다.

강창용 농경연 위원은 비료값 평균 물가보다 낮은 상승률, 국내시장 감소 출혈 수출로 사면초가, 농협 수요자 독점적 시장 탈피, 산업구조조정, 전문성비료 생산구축 등 주장, 현해남 교수는 "농가의 농업경영비 구성요인 중 비료비가 15%로 높은 비중을 차지, 무기비료 비료비 상승 주범 아니다며 비용 상승의 요인으로 "일부 영양제 효과 과장홍보, 가격 불합리, 공정규격 불명확부분 개선, 비료 포장지 전체 양분표기 등 무기비료 옹호 주장. 전친농은 OECD 국가 중 단위면적당 질소와 인산 투입량이 가장 높은 주 요인은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현 시스템 문제, 면적대비 비료 사용량 확인 방식은 대규모 농가에 많은 보조금을 주는 구조로, 농민의 구매협동을 통해 실제 소비량만큼 구매하고 적정하게 사용해야 한다" 주장. 한농연은 '유기질비료 티켓제'를 시행 주

장.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친환경농자재 지속 지원·비료원료 조달 관리 할 계획. 차성희 농협경제지주 농자재사업단장은 비료비 절감방안으로 '작물·비종별 적정 시비지도'가 중요. 농진청 토양비료과장은 '유기질비료 적정 공급량 산정기반 마련계획 발표했다.

◎농진청, 농약업계 애로사항 청취협의회...소통 강화...두고 불일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농진청 국제회의장에서 농약 업무 처리과정상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을 위한 '농약산업계 애로청취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주제 발표에 이어 농약등록절차 및 평가개선방안과 잔류 GLP 및 PLS 도입에 따른 주요 현안의 열띤 토론이 이어 졌다.

이자리에서 연구개발국장은 "산업계와의 격의 없이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 국내 농업현실과 법적 테두리에서 안전하고 우수한 농약을 개발 보급하며 산업계의 새로운 도약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농자재산업과장은 "관계기관과 업계와의 소통의 장으로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청취, 수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空約' 아닌 '公約'이 돼야 할 것이다.

◎농자재값 내리고 싶어도 신용카드 수수료 '걸림돌'

지역농협, 카드결제 늘어 부담 수수료 2.26~11.4% 적용, 농협별 연간 수수료 수천만원 "농가위해 1%대로 낮춰야" 가맹점 수수료율은 타분야가 영농자재 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영농자재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농가소득을 높여주려고 많은 신경을 쓰는 것과 달리 카드사들은 농업·농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농민신문 기사)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본격 시행



국내 농산물은 물론 수입농산물의 잔류농약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고 농관원은 밝혔다. PLS는 국내에서 사용허가가 났거나 수확 이후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여개 작물, 460여종 농약을 대상으로 7,600여개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쌀(190건)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있으나, 쌈채소, 나물류 등 소면적작물에 대한 허용기준이 부족한 상태다. 급증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PLS가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나 일부 국내 농산물의 경우 PLS 대비가 안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오이에 사용 가능하다고 등록된 농약을 참깨에 사용해 0.01mg 이상 검출되면 유통금지 대상이므로 등록안된 약제는 절대 사용하면 안된다. 사용 중인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이 보다 시급히 설정되어야 한다. 소수지만 열대과일 농가도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없고, 상추에 쓰는 농약을 깻잎에 금지할 경우 농민만 처벌 받는 모순이 나타날 수 있어 농가의 불편을 줄이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PLS는 2018년 12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시행된다.

◎중국 상해 CAC 성료-종료무렵 ‘사드, 북병 터져 많은 성과 희석우려



지난 3월1일부터 3일까지(3일간) 상하이신 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린 올해 CAC (China International Agrochemical & Crop Protection Exhibition)는 100개국에서 3만2000명이 참관,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25개국 1300개 기업이 부스를 설치했다. 인도, 한국, 베트남, 태국, 파키스탄, 오스트리아, 터키 등이 국가 단위로 참여했다. 한친농은 실용화재단, KINTEX와 공동으로 주관해 한국관을 개설했다.

한친농은 이번 한국관 설치를 위해 지난해 CAC 때부터 실용화재단과 킨텍스 측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특히 작년에는 CAC 측의 부스비 15% 감면 혜택밖에 못 받았으나 올해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4종복비, 유기농업자재 등 18개 업체가 부스지원을 받아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상담을 하였다. 새턴바이오텍(주), (주)카프코, (주)흙살림, FM애그텍, 제이아그로(주), 서부어류비료사업소, 바이오아그로, 바이오크롭스 등 18개사가 한국관에 부스를 마련 상당한 수출성과를 얻어냈다. 특히 남보, 오더스, 누보, 도프, 고려바이오, 대유, 유니텍바이오산업, H설퍼 등의 기업이 별도 독립 부스를 열고 바이어들과 성과가 가시화된 상담을 이어갔다. 실용화재단은 한국관 설치 외에도 박람회 하루 전 바이어들을 초청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 이번 한국 기업들의 수출 성과는 총 742건으로 254만 불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 수출상담액만 792만 불로 집계됐다. 고려바이오는 3년간 약 50만 불 규

모의 친환경비료 상해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오더스 역시 올해에도 대만, 사우디 등과 농약 및 비료 제품의 15만 불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실용화재단은 향후 전체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정보교류회 계획을 수립하고 전시회 만족도, 애로사항 등을 파악, 특히 내년 CAC 참가 기업의 규모를 늘리고 지원방안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종료일(3월3일)부터 국내 사드배치를 두고 중국메스컴에서 집중 거론 분위기가 싸늘해 졌다. 금번 수 많은 수출상담 결과가 계약 연기 등으로 성과가 희석될까 우려스럽다.



중국 CAC
현장 스케치

[기타 소식]

◎제2회 유의날 기념 심포지움(3월9일 토비학회)

지속가능한 농업위한 건강한 휴가꾸기, 토양환경보전방안 등 다양한 정책제언

◎중소기업연, 농식품부장관초청 정책간담회

수출상담회 참석지원범위 확대, 식품산업정책 체계화, 유기질비료 농협취급 수수료 인하, 대중국 수출시장 비상점검 TF팀 운영 등 정책건의

◎농식품부 · 산하기관 조직 개편

비료 등 농기자재 산업을 수출유망 산업으로 육성하는 취지에서 농기자재정책팀은 식량정책관에서 창조농식품정책관으로 이관. 경영인력과는 농촌정책국에서 농업정책국으로,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이 농업정책국에서 식량정책관으로 변경, 축산정책국에 동물복지팀과 농촌정책국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추진팀 신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통제센터 및 제주도에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 신설됐다

◎첨단농축산기자재박람회



첨단농축산기자재박람회(KIAFE 2017)가 금년 11월 15일(수)~17일(금)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9홀에서 개최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킨텍스가 공동주최하고 당협회가 후원한 이번 박람회는 첨단농기자재관, 첨단축산기자재관, 미래농업관, 6차산업·도시농업관 등 4개의 관으로 이뤄진다

◎중국 양링 농업첨단과학기술박람회

CAF; China Yangling Agricultural HI-Tech Fair을 11월5일부터 7일까지 시안 인근 양링시에서 개최된다. 농촌진흥청은 R&D 홍보관 확대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당 협회도 친환경농자재 한국관을 무상 설치키로 지난 2월26일 양링시 국제국과 합의한 바 있다. 양링시는 서북농림과학기술대학*을 중심으로 400여 하이테크 농업기업들이 농업신기술을 응용한 창업과 미래 농업기업가를 배출하고 직접 농기자재 보급까지 관장하고 있는 바 지난 2.26~28 동대학을 방문 한친농과 대학간 상호기술협력을 강화키로 협약을 추진한 바 있다.

◎한진농 안인박사, 베트남 방문 기술이전 협력 및 기업매칭 워크숍 참석

베트남 과학기술부 및 베트남 농업협회 주관 한국의 비료, 종자, 수확 후 관리, DHC,Taurine 함유 계란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협력 및 기업매칭 세미나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 할 예정이다. 베트남 과학기술부장관과 농업청장이 참석하고, 중소기업청, VTTC,SATI, 과학기술 이전 연구소 및 센터 등 베트남 농업관련 기관에서 60명 정도가 참가 할 예정이다. 추후 진행사항을 보고드릴 계획임.